

22. 1994年度 主要業務報告

資料提供：建設部

I.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평가

지난 한해동안 국민이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구축에 주력

- 건설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관위주로 운영되어온 각종 인·허가제도를 등록·신고제로 전환
 - 「되는것」과 「안 되는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행정기준을 마련
- 국토개발에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기업가적 창의가 투영될 수 있도록
 - 토지구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방적·적극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
 - 수도권도 규제위주의 시책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기능정비방안을 강구
 - 지방발전의 실질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도 제정
- 건설관련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 대형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
 - 「민간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건설업계의 의식개혁을 추진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생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대폭 허용하되
 - 녹지훼손과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예방하는 보완책을 마련
-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 도로·용수등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

- 주택 63만호를 건설하고 맑은물 공급등을 역점 추진
-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 건설관련 입찰 및 도급제도를 국제화에 맞도록 정비
 -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평 가

- 지난 한해동안 건설행정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2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쇄신의 기반마련에 진력
- 그러나 아직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일선현장에까지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민주화·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국제화·개방화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대두

Ⅱ. '94년도 건설행정 기본방향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균형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공간」을 조성

- 개혁에 적극 부응하는 건설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에서의 「건설관련 제도와 관행의 쇄신」을 추진
-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국토개발」을 추진
- 국제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용수·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
- 선진화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과 맑은물 공급 등 「생활여건의 질적 향

상」을 추진

- 미래화에 대비한 「건설업 육성과 해외건설 활성화」에 주력

Ⅲ. '94년도 주요 추진시책

1. 건설행정의 「탈」규제

- 건설행정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다루는 업무성격상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와 국토보전 목적에 치중하여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임
- 건설행정은 규제가 없는 원점으로 돌아가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탈」규제의 정신으로
 - 지난해 법률개정 등 규제철폐의 틀을 구축한 데 이어
 - 금년에는 일선현장에서 인·허가업무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각종 행정지침·유권해석 등을 일제 정비
- 특히 현장민원과 부조리가 많은 건축분야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하고, 준공검사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등 공무원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 제도개선의 참뜻이 일선창구의 관행과 의식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 현장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과 의식교육을 강화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여 정부의 신뢰를 확보
-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행정 규제완화대책반」을 상설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

2. 국토의 균형개발

2-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의 체계적 정비

- 수도권이 「북경-서울-동경」을 잇는 동북아시아 발전축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능정비를 추진

- 서울은 정보·서비스산업을 확충하여 국제기능을 강화

- 수원·안산·인천 등 부심도시는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정비

- 안성·이천·문산·평택 등 외곽이 중소도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여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차단

※ 대형빌딩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지역균형개발 재원으로 활용

○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거점도시로 육성

- 부산권 : 종합금융단지·세계무역센터 건립 등으로 환태평양경제권을 겨냥한 국제교역기능을 강화

- 대구권 : 전자·섬유 및 패션산업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

- 광주권 : 「상무신도심」조성등 업무기능과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

- 대전권 : 중앙행정기능(정부 제3청사)의 수용과 함께 과학연구·첨단산업기능도 확충

2-2. 서해안 신산업지대의 개발

○ 21세기 환인해 경제권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적극 육성

- 「아산-군산·장항-대불-광양」을 잇는 개발축을 형성하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

· 아산만 : 경인지역에 밀집된 산업과 물류기능을 분담

· 군산·장항 :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육성

· 대불 : 광주첨단기지와 연계하여 서남권경제의 중심지로 개발

· 광양 : 부산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의 전진기지로 육성

- 광역개발에 필수적인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역점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여 당진-대전(100km, 1조 2천억원)고속도로와 군산-전주-함양(100km, 1조 2천억원)고속도로의 신설을 검토

· 장래 예상되는 용수부족현상에 대비하여 탐진댐(89백만톤, 890억원), 적성댐(1.5억톤, 1,326억원)을 새로이 건설

- 2001년 목표로 추진중인 126건(22조 3천억원 소요)의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2-3. 농촌과 낙후지역의 발전

-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농통합형 지역개발을 추진
 - 지방중소도시에 주변 농촌인구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단·농공단지등 산업시설과 교육·문화시설을 적극 지원
 - 농어촌이 도시에 뒤지지 않는 생활환경을 갖추도록 도로·주택·상하수도 등을 확충
 - 농촌과 지방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여 투자를 확대
 - 농어촌 주택개량에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
 - 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농어촌지역에도 맑은 물을 공급
-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 등 농업이외의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관련규제를 대폭 개선
 - 농촌의 토지거래에 따른 허가제 등 각종 거래규제를 완화
 - 보전필요성이 적은 농지·산지는 타용도로의 개발을 촉진
- 태백지역과 충북 및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관광·특용작물단지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

3. 기업의 생산여건 개선

3-1. 도로투자의 확대

- 도로가 전국 수송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5년간 도로능력을 1.6배로 확충(교통량은 1.3배 증가예상)
- 금년에는 교통세와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하여 작년보다 37%가 늘어난 총 3조 6천억원을 투자
 - 고속도로에는 1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사업을 추진
 - 인천-안산, 하동-광양, 신갈-원주, 반포-양재 구간은 금년중 완공(총 115km)

- 신공항 고속도로(41km, 8,840억), 대전남부 순환고속도로(21km, 2,496억)는 신규 착공
- 국도에는 1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300km의 혼잡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물동량이 많은 공단과 항만 배후도로에 중점 투자
 - 녹산공단('97완공) : 4km, 1,154억원 • 군장공단('96완공) : 31km, 958억원
 - 창원공단('95완공) : 9km, 258억원 • 아산공단('96완공) : 79km, 2,842억원
- 적은 투자비로 소통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도로관리체계를 구축
 - 교차로 입체화·가변차선·병목지점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
 -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첨단도로교통시스템 개발에 착수
-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터널·교량 및 수익성 있는 노선에는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
-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로 등 교통시설과 연계된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

3-2. 용수공급의 원활화

-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울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물 부족현상이 발생
- 금년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공업용수도 건설에 역점
 - 울산·온산과 대불지역의 용수부족은 8월까지 완전해소
 - 군산공단과 군장산업기지의 공업용수사업은 연말까지 완공
 - 앞으로 주요 지방공단과 농공단지의 공업용수에 대하여도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
- 댐 등 수자원개발에는 최소한 7~8년이 소요되므로 2000년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을 추진
 - 현재 추진중인 6개 다목적댐을 '98년까지 완공
 - 남강댐 : 5.7억톤, 4,505억원('87~'96) • 횡성댐 : 1.1억톤, 798억원('90~'96)
 - 용담댐 : 6.5억톤, 5,600억원('90~'98) • 밀양댐 : 0.7억톤, 984억원('90~'97)
 - 부안댐 : 0.4억톤, 579억원('90~'95) • 영천댐도수로(53km) : 1,657억원('90~'97)
 - 탐진·적성·영월 등 3개 댐을 2001년까지 건설
- 새로이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

3-3.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

- 앞으로 10년간 소요되는 공장용지는 3,000만평으로 전망
 - 2001년까지 모두 3,500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연차별 개발계획을 추진중
- 금년에는 신호(부산)·안동 등 6개 공단(522만평)을 새로이 개발하고
 - 현재 추진중인 12개 공단에서 342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
- 최근 다소 침체된 공장용지개발과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
 -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공장용지 분양가를 인하
 - 도로·용수 등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
 - 녹지·항만부지등 무상시설을 줄이고 사업시행자 이윤도 축소
 - 특히 공장용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
- 새로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장용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단일 기업에게도 공단개발권을 허용(종전을 3개이상의 기업에게만 허용)
 - 현재 70%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농지전용비율도 탄력적으로 완화
 - 행정절차도 간소화하여 공단 개발기간을 단축(3년→2년)

4.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4-1. 지가의 지속적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 '92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지가는 지난해에도 큰폭으로 하락

지가변동율(%)	'89	'90	'91	'92	'93.9
	32.0	20.6	12.8	△1.3	△5.8

- 그러나 아직도 땅값이 높아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금년중 항구적인 지가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대지·공장용지등 현재 국토의 4.

5%에 불과한 경제적 활용토지를 대폭 확대

- 규제완화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토지 관련 정보망을 구축
 - 금년 1월부터 검인계약서를 전산화하여 토지거래동향을 즉시 분석
 - 금년말까지 주민등록·지적·공시지가자료를 상호연결한 종합토지전산망을 구축하여 토지관련 거래 및 과세제도를 확립
- 부동산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추세를 감안하여, 택지소유상한제·토지거래허가제·공시지가제 등 토지공개념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

4-2. 주택의 공급확대와 지속적인 가격안정

-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78%에 불과하고 집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실정
- 신경제계획 기간중 총 28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98년까지는 보급율을 90%로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 금년에는 55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율을 81%로 제고

주택보급율(%0)	'92	'93	'94	'98
	76.0	78.5	80.9	90.0

-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20만호를 건설
 - 특히 노사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며
 -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제도를 시행
- 민간부문에서는 시장기능에 따라 35만호의 주택건설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택지와 금융지원을 확대
 - 주택건설의 관건인 택지확보를 위하여
 - 택지가 부족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도시 기반시설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추진
 - 기존도시내의 재개발·재건축 및 주상복합건물을 활성화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
-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하기 위하여 금년중 총 7조 8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

- 국민주택기금은 3조 5천억원을 조성하여 소형공공주택에 지원
- 민영주택자금은 4조 3천억원을 조성하여 서민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으로 지원
- 금년부터 세금을 감면받는 「근로자 내집마련저축」제도를 시행
 - 계약기간 : 10년이상
 - 납입금액 : 월100만원 이하
 - 이자소득세 전액 감면
-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제도를 정착
 - 지난해 도입한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통하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활성화
- 공동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 아파트 감리제도와 훼손보수제도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 주택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 도모
 -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인 개·보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

4-3. 맑은 물 공급 확대

- 지금까지 대도시지역에 치중했던 광역상수도를 지방중소도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건설
 - 상수도 보급율 : '92년 80% → '97년 87%
- 금년중 금호강·주암댐 등 3개 광역상수도를 완공
 - 수도권(V)·부안댐·주암댐(Ⅱ) 등 10개 광역상수도를 신규 착수
- 생산된 수돗물이 집안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적저하와 양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20년이상 된 낡은 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
 - 집안에는 스테인레스강 등 녹슬지 않는 관의 사용을 의무화
 - 현재 20%인 누수율을 '97년에는 12%로 축소
-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에도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 하류지역에 위치한 취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
 - 고도정수처리기술을 국가선도 기술사업으로 중점 개발
- 물자원의 낭비를 자제토록 적극 계몽하고, 상수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돗물 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수도물 1톤 : 219원

• 시판 생수 1톤 : 18만원

5.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 철저

- 지난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금년이 「부실공사 없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추진
 - 교량·터널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적격 시공업체를 선정
 - 하자담보기간 연장·대표자 처벌 등을 통해 시공자의 책임 강화
 -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책임감리를 실시하고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전문감리원에 의해 철저한 감리를 시행
- 부실시공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가 평상시 대책으로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위험도가 높은 교량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보수하거나 철거
 - 교량 : 11,804개소중 375개소
 - 아파트 : 51,095개동중 82개동
 -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
- 이와함께 건설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성실시공을 다짐하는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부실공사의 관행을 근절

6.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 활성화

- 건설시장의 개방이 국내업계의 경쟁력 배양과 해외진출 확대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 국내건설업은 그동안의 노동집약적인 단순 도급시공체제로 부터 기술집약적인 고도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
 - 종래 가격과 물량등 외형위주의 입찰과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품질과 기술능력이 우선하도록 입찰가격 사전심사제를 강화

- 부가가치가 많은 설계와 종합관리분야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발주제, 대안입찰제등을 확대 시행
-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의 분업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하도급 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부대입찰제를 시행
- 신소재 개발, 로봇트 시공등 주요 핵심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고,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고급기술의 국내전수를 촉진
- 해외건설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 주력시장이었던 중동·동남아 이외에도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을 추진
 - 중국·러시아·베트남등에 대하여는 선진국과의 합작진출·자원협력·공장 및 공단 건설과 연계한 복합공사 수주에 역점
 - 미국·유럽·일본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주거·상업용 부동산개발과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참여에 주력
 - 우리 업체가 취약한 프랜트 등 기술집약형 공사는 선진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합작진출을 추진
- 지난해 51억불 달성을 계기로 해외건설이 연간 100억불대의 수주고를 재차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연간수주액	81년	88년	91년	93년
	137억불	16억불	30억불	51억불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을 완화하고, 민·관 합동의 시장조사를 적극 추진
- 해외공사가 금융과 연계하여 발주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업체에게도 연불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현지금융 조달에 따른 규제도 완화
-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유망시장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건설외교 노력을 강화

건설부 직원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국토개발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선진국진입을 위한 국민생활향상과 건설행정 규제완화등 당면과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드립니다.